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

301-322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1층 / 전화 331-0092 / 전송 252-6976 홈페이지: www.cham.or.kr 공동대표: 김경희, 윤해강 / 담당자: 김정동 (019-471-7468, myblue9@hanmail.net)

<대전지역 4개 시립대학 회계분석 보고서>

대전등록금네트워크에서는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인상에 타당성이 있는지 대전지역 사립대학의 예결산안을 분석하였다. 대전지역에는 사립대학 이외의 국립대학과 전문대학이 있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훨씬 크다는 현실과 회계방식이 서로 비슷하기에 대전지역 4개 사립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의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항목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전등록금넷에서 분석한 대전지역 사립대학 예결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입예산은 줄이고 지출예산은 늘려잡는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이다.

수입예산에선 등록금수입 예결산의 차이가 평균 31억~37억, 가결산을 통해 근사치는 잡을 수 있는 미사용전기이월자금도 4억에서 30억까지 덜 책정되었다. 지출예산인 보수항목에선 경직성경비임에도 12억~45억, 관리운영비에선 27억 가까이 더 책정되었다. 과다한 지출예산과 축소편성한 수입예산은 그만큼이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법인전입금과 국가지원이다.

법인전임금은 경상비전입금과 자산전입금이 거의 없는 것은 둘째치고 법정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내지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수입예산을 아예 잡지 않거나 32%수준만 잡고 이것을 내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 거기에 국가지원은 운영수입의 3~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법정부담금조차도 내지않는 법인과 OECD평균의 1/3수준의 지원을 하는 국가가 학교발전과 교육여건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물가인상률의 두세배에 이르는 등록금인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셋째, 자산매입지출(토지매입비, 건축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의 법인부담이 거의 없다.

학교시설투자에 법인의 부담은 12%에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에서 자산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법인이 시설투자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지원이나 기부금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100% 법인에 강요할 수 없지만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고 이것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전등록금넷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국가의 재정지원이다.

교육은 단순히 수혜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투자없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만 적용하여 등록금 더 내라고 하지말고 적어도 OECD평균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법인의 책임성 강화이다.

사립대학 법인의 존재이유는 교육투자이다. 하지만 설립이후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조차도 내지 않으면서 국가의 지원과 학생의 등록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책임성강화를 위해 법인의 전입금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 매입지출에 있어 법인부담률을 정해 일정수준의 부담을 의무화 해야한다.

셋째, 대학예산편성 합리화이다.

현재 사립대학 예산편성은 전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선 예산편성 직전까지 집행된 예산과 남은 기간 집행예정액을 결산양식에 따라 정리한 가결산(추경결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월, 적립금의 과다축적을 지양하고 과도한 자산지출 자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최소화, 소모성경비 절감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이는 법개정을 통해 적립금 조성 허용기준을 명시와 자산적 지출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2009. 2 .26

※본 논평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등록금네트워크